



[뉴스] '노쇼 백신' 맞아보니 두통·피곤·오한 등 후유증 '개인차' 02



Economy

코스피	317.37 (0.00)	코스닥	967.20 (0.00)
금리(미국 3년)	1.158 (+0.009)	환율(원/달러)	1122.60 (-1.40) (4일)

택배물량 120% 폭증 단가인상 대타협 난제

'삼중고' 빠진 택배시장

택배가 우리들의 생활속으로 빠르게, 깊숙히 들어온 가운데 곳곳에서 난제를 만나고 있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덩달아 업체간 경쟁까지 격화되며 운반비가 추락해 결국 택배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또 택배를 놓고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기사간 팽팽한 줄다리기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는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출입을 놓고 입주민과 택배기사들이 해결점을 찾지 못한채 한 달 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6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급성장 택배시장, 곳곳서 마찰음 단가하락 따른 서비스 저하 우려 '지상 차단' 입주민들과 줄다리기 택배사들, 연초부터 단가 인상에 사회적 논의기구 외부용역 의뢰

5일 물류업계와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당시 연간 14억 598만 박스였던 택배 물동량은 이후 빠르게 늘면서 2020년엔 33억 7373만개로 8년 동안 120%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택배시장 매출액도 3조 5232억원에서 7조 4925억원으로 112.7%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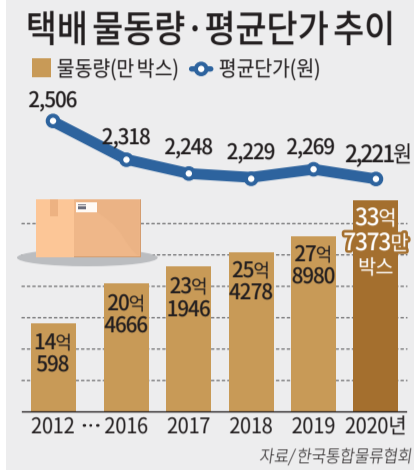
반면 박스당 택배 평균단가는 2012년 2506원에서 지난해엔 2221원으로 이 기간 11.4% 하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택배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난해에도 택배 평균단가는 1년전의 2269원보다 2.1% 떨어졌다.

경쟁 격화, 택배 단가 하락 등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우려한 택배회사들은 자체적으로 택배 단가 인상을 결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택배 매출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고객(화주)들과 신규·재계약시 박스당 최저단가를 올리면서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경우 박스당 최저단가를 기존 1600원에서 1850원으로 인상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한진은 1800원, 롯데글로벌로지



스는 1900원으로 각각 올랐다.

복수의 물류회사 관계자는 "기업고객에 대한 최저단가 인상 조치는 택배 시장 성장에 따른 신규 투자, 서비스 품질 개선, 택배 관련 종사자들의 적정 수입 보장 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기업고객이란 이커머스 기업, 온라인 유통회사 등을 말한다.

아울러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개인택배 단가도 올랐다.

택배업계 3위권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가장 먼저 나서 지난 3월 15일부터 소형(5kg·110cm 이하), 중형(15kg·130cm 이하), 대형(25kg·160cm 이하) 택배비를 1000원씩 인상했다.

초소형(3kg·80cm 이하), 소형(5kg·100cm 이하), 중형(15kg·120cm 이하), 대형(20kg·160cm 이하)의 4단계로 된 한진은 초소형과 중·대형은 각각 1000원씩 올리고, 소형은 2000원 인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50.1%를 차지한 CJ대한통운은 개인택배 단가 인상은 당분간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앞서 정부,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택배 가격 인상 여부를 위한 용역을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해 놓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연구용역은 택배의 거래구조를 살펴보고 단가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5월 말까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1일부터 입주민들이 안전을 이유로 택배 차량의 지상도로 출입을 막아 줄다리를 하기 시작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의 택배 문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LTV 완화'해도 저소득층엔 실효성 없다

7월 DSR 40% 규제 시행 걸림돌 소득 낮은 실수요자 대출 또 제한

정부가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로 거론되는 방안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지난 주 발표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소득이 낮은 청년·무주택자는 대출이 어려운 상황 이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청년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

정이다.

◆무주택자 LTV 10%p ↑

주로 거론되는 방안은 LTV를 확대하는 것이다. LTV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말한다.

현재 LTV는 무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p) 확대 적용된다. 요건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9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다.

두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하면 LTV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에서 60%로 올라 대출 한도가 늘

어난다.

정부는 우선 LTV를 10%포인트 이상 올린 이후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한해 LTV를 9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내비치고 있는 만큼 대출시장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LTV를 10%포인트 올리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60%, 조정대상지역은 70%까지 확대된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짜리 집을 사면 최대 4억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코로나 어린이날' 많은 인파

어린이날인 5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스1

'反쿠팡' 이커머스, 판매자 친화정책 묘수

판매 수수료 파격 혜택부터 광고비 지원·빠른 정산까지 '고객중심' 쿠팡과 다른 행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들이 파격적인 수수료 혜택과 빠른 정산 등 판매자 친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유능한 판매자들을 영입해 상품 가짓수를 늘려 몸집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아이템 워너' 제도로 판매자들의 원성을 자아낸 쿠팡과는 다른 행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롯데온은 오픈마켓 판매자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 수수료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새롭게 진입한 판매자들의 상품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광고비 30만원도 지원한다. 판매자가 할인 쿠폰을 발급하면 롯데온이 쿠폰 할인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위메프는 포털 방식의 업계 최저 수수료인 2.9% 정책을 도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오픈마켓 평균 수수료는 13.6%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플랫폼 사업자들의 수수료는 5%다.

위메프는 최저 수수료를 도입한 것은 물론, 상품 카테고리마다 차등 적용하던 수수료 정책도 폐지했다.

일반적으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가

테고리별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남성 캐주얼 판매 수수료는 15.4%, 디지털 기기는 12.8% 등이다. 위메프의 2.9% 정률 수수료 적용은 상당히 파격적인 정책으로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이는 지난달 '마이너스 수수료' 정책을 들고나온 티몬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티몬은 지난달부터 판매자가 티몬에 상품을 등록할 때 옵션을 포함하지 않고, 단일 상품으로 등록할 경우 판매수수료를 -1%로 자동 적용되게 했다. 마이너스 수수료를 내걸어 판매수수료를 환급해준 것은 티몬이 최하다.

(3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어린이날 맞은 5일 코로나19 확진자 676명... 서울 234명 /사진 뉴스1
- ▲ 백신 1차접종 누적 353만명, 전 국민 6.9%... 6일부터 70~74세 접종

- ▲ 검사 13명뿐인데 1040건 접수... 공수처, 사건 이첩 검토
- ▲ 강원 영월 돼지농장 ASF 확진... 48시간 이동 중지



- ▲ 정의용, 브루나이 외교장관 회담... 미얀마 아세안 합의 공감
- ▲ 청문회 마친 노형욱, 공공주도 공급 대책 속도 '예고' /사진 뉴스1